

도내 정치권 “해병대 박정훈 대령 보직 부여 환영”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진상 규명을”

민주 도당 “법치주의의 중요성 되새겨” · 도의회 “진실 밝히기 위한 싸움 이어갈 것”

해병대가 박정훈 대령을 인사군무 차장으로 보직을 부여한 것과 관련, 6일 도내 정치권이 환영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 하고 나섰다.

▲민주 전북자치도당 “정의의 향한 용기·법치주의의 중요성 되새겨”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박정훈 대령의 보직 부여를 환영했다.

성명서에서 서소영 대변인은 2023년 여름, 채수근 상병이 상부의 무리한 지시와 명령으로 인해 적절한 보호 장비 없이 수색작업을 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을 언급하며, 이를 목도한 국민들의 충격과 슬픔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특히,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의 정당한 절차를 방해했고,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서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군의 독립적 사법 체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개입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다행히 군사재판부는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는 권력의 부당한 개입에 맞선 정의로운 판단으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령은 여전히 보직 해임 상태로 지내야 했고, 이는 그가 겪어야 했던 부당한 희생이 연장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서 대변인은 박정훈 대령이 다시 보직을 맡게 된 소식을 반기며, 이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은 상부의 부당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절치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려 했으며, 이는 군의 명예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행동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 대변인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는 권력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따르는 수많은 박정훈들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세워져 왔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정

의를 향한 용기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군의 독립성과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권력의 개입에도 단호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군이 정치적 외압 없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 대변인은 “다시는 정당한 수사가 방해받고, 공정한 절차가 왜곡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군의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으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전북자치도의회, ‘박 대령과 함께 진실 밝히기 위한 싸움 이어갈 것’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서난이 대변인 명의로 이날 오후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채수근 상

병의 순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헌신해 온 박정훈 대령의 인사 군무차장 보직 부여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대령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외압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2025년 1월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한 상황이다.

도의회는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군검찰의 항소를 포기하고, 해병대는 박 대령이 수사단장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군 기강을 확립하고 정의로운 군문화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이 공정하게 조사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진실 규명을 위한 모든 과정에 적극 동참하며, 정의와 진실이 실현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만호 기자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개소식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창조경제센터는 6일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개소식’을 개최한 가운데, 김준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전북 유치 추진 방향 모색

최형열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간담회 개최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과 시너지 효과 극대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농협중앙회 전북유치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형열 위원장을 비롯해,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장, 김진명 농협중앙회 전북유치추진위원장,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연합회장,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자 약 20명이 참석하여,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의 필요성과 그동안 농협중앙회 전북 유치 추진 상황을 공유한 뒤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간담회에서는 농협중앙회 유치 시 전북에 위치한 농생명 관련 연구기관(50개소)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의 연계로 자산운용중심의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농협중앙회 유치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기로 입을 모았다.

현재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정부 세부 방침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간 국회에서도 ‘농업협동조합법’ 제114조 소제자 관련 규정 개정 건의 등 농협중앙회 전북이전을 위해 노력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오는 간담회에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 성과를 내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농협중앙회는 현재 농생명 관련 1차 이전기관 및 관련 기업과 시너지 효과로 농생명 산업 고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지속 가능 농업 생산기술 도입 정책 방향 논의

도의회, 농업 생산기술 대전환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오안(완주2)·나인권(김제1)·서난이(전주9)의원은 6일 ‘농업 생산기술 대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는 나인권 의원이 좌장으로 주도했으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농업 생산기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 발제자로 이상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부장이 나섰고, 전북대학교 양명균 교수, 홍영기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전찬우 AGMO 대표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대 본부장은 경험에 의한 농업에서 데이터에 의한 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농업분야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농업 데이터와 인공지능기반의 농작업 대행 서비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으로 자리한 나인권 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농업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하여 스마트 농업, 친환경 농업 기술, 데이터 기반 관리 등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생산기술의 발전 방향을 논



하는 지리가 되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 필요하고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업 생산기술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오안 의원은 “농업 생산기술의 발전은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난이 의원은 “최근 미국에서는 기술 혁신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미래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최... 상임위별 현장 방문 진행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6일부터 1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비롯한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사업지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조례안 18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15건으로, △익산시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안 △익산시 모자보건 조례안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등이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을 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박종대 의원 발의), 청년·후계농업인 예산

확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양정민 의원 발의)을 채택했다.

한편, 5분 자유발언에서 소결영 의원은 도시가스 사각지대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LPG가스 사용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동연 의원은 의국인 대상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촉구했으며, 김미선 의원은 모현동 신시가지 일대 공영주차타워 건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영자 의원은 자살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오임선 의원은 도시관리공단 운영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 의원은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환승 정책 필요성에 관해 발언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급변하는 안보 환경 지역 방위태세 강화

도, 제1차 지역 통합방위회의 민·관·군·경·소방 협력

전북특별자치도는 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지역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지역 통합방위회의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민·관·군·경·소방이 협력해 지역 방위태세를 강화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김관영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35사단장, 경찰청장, 소방본부장, 시·군 담당과장, 국가중요시설, 유관기관 등 통합방위위원 및 관계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 대남 위협 전망 △드론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확립 △테러 방지를 위한 경찰특공대 대응 방안 △핵심노드 중심의 국가중요시설 방호에 대해 기관별 발표가 이뤄졌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위협과 드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 상황 속에서 민·관·군·경·소방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통합방위의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익산시가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유공자 14명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35사단장, 전북경찰청장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과 테러는 이제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실”이라며,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 항상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지역통합방위회의에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김관영 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새만금 신공항, 조류충돌 참사 예고”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경제성 없어 수라갯벌 보존, 신공항 건설 철회를”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회원 20여명이 6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공항이 전북의 희망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주장”하며 신공항 건설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은미(진보당, 순창), 오현숙(정의당, 비례) 전북특별자치도의원과 전북녹색운동연합 김지은 국장도 동참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항공의 무안공항 참사의 원인이 조류 충돌 위험으로 추정되는바, 새만금 신공항의 경우 조류 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보다 650배나 더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공기와 조류 충돌 사고는 대부분 공항 13km 안에서 발생하는데 새만금의 경우 24만여 마리가 되는 많은 새들이 공항 인근에서 살아가고 있어 사고 위험도가 많은 만큼 새만금 신공항을 건설하지 않는 것만이 항공사고 위험을 줄이고 수라갯벌을 보호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회원 20여명이 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새만금 신공항의 경제성을 언급하며 애초에 대규모 물류와 여객 자체가 없어 적자 공항으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고 주장하며 새만금 신공항의 건설 철회를 제기했다.

끝으로 시민단체 측에서는 도의회에서 말하는 새만금 신공항의 규모 확대로 조류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

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맹목적인 망상에서 빠져나와 현실을 직시하여 새만금 신공항의 건설을 철회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에서는 항공안전성 확보 및 새만금 개발사업 성과 확대를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규모확대 촉구 건의안을 지난날 11일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원포트 무역항 지정 촉구 범시민 서명 나서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 5일부터 14일까지 군산항과 군산새만금 신항을 원포트(One-Port)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범시민 가두서명운동을 수송동 롯데마트와 중앙로 이성당

앞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새만금특별위원회 김영일 위원장과 우종삼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시의원들이 순차적으로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원포트항 지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서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김우민 의장은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원포트 운영을 촉구하는 범시민 서명을 받아 시민과 전북도민의 염원을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이재준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자름길